

# 5·18 학살 ‘모르쇠’ 전두환...광주는 그를 어떻게 단죄하나

### 구망월묘역 입구 전두환 기념비식 밝기 무릎꿇은 전두환 동상 뿔망치로 때리기

1980년 5·18민중항쟁이 발생한 지 40주년이 흘렀다. 하지만 발표명령자가 누구인지, 행방불명자는 어디로 갔는지 등 그날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신군부는 5·18관련 자료를 전부 없애거나 교묘하게 왜곡·조작했다. 광주학살의 주범인 전두환(89)은 여전히 ‘광주와 관련이 없다’며 5·18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죽은 자’는 있으나 ‘죽인 자’는 밝혀지지 않은 한스런 세월. 광주는 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광주만의 방식으로 5월학살 최고 책임자 전두환을 단죄하며 그날을 잊지 않고 있다.

광주가 전두환을 응징하는 방식은 ‘밧고 때리기’다. 전두환을 직접 밧고 때릴 수는 없으니 전두환 기념비를 땅에 묻어 밧고 지나가거나 동상을 만들어 흔내고 있다.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망월동 구묘역) 입구 바닥에는 ‘전두환 민박 기념비’가 있다.

전씨가 부인과 함께 1982년 3월 전남 담양군 고서면 성산마을을 찾아 민박한 것을 기념해 마을에 세운 것이다. 기념비에는 ‘전두환 대통령 각하 내외분 민박 마을’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광주·전남민주동지회는 1989년 1월13일 기념비를 부쉬 망월묘역에 가져와 바닥에 묻었다.

전두환의 5·18 만행을 알리고 5월 영령들의 혼을 달래며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묘역 바닥에 심은 비석을 추모객들은 밧고 지나갔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심상정 국회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수많은 인사들과 추모객들이 이 비석을 밧으며 5·18의 의미를 되새겼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밧아 글자가 지워지고 원형이 훼손돼 자제하자는 의견과 전씨가 5·18에 대해 진심어린 사죄를 할 때까지 비석밧기는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맞부딪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비석이 갈라지고 글씨도 흐려지는 만큼 유리 등으로 덮는 것이 어떠한 의견도 나왔지만 결국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광주 서구 치평동 5·18자유공원에는 11공수여단에 있던 ‘전두환 비석’이 놓여 있다.

이 비석은 1983년 11공수여단이 전남 담양으로 부대를 이전하면서 세운 것으로 ‘선진조국의 선봉’이라는 한문 글자와 그 밑에 ‘대통령 전두환’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전씨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무차별적인 진압작전을 수행한 11공수여단의 ‘전승기념비’ 격으로 설립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부대에서 철거한 뒤 지난해 5월 광주로 옮겼다.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전두환 처육상’을 한 시민이 뿔망치로 내려치고 있다.

11공수여단 정문에서 철거된 이 비석은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자유공원 내로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5월단체 회원들이 반발해 자유공원 밖에 방치했다. 땅에 묻지는 않았으나 시민들은 항의의 표시로 거꾸로 놓힌 비석을 밧고 올라서곤 한다.

비석을 밧는 것 외에 전두환 동상을 만들어 ‘회초리를 드는’ 퍼포먼스도 한 단죄의 방법이다.

최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는 ‘무릎꿇은 전두환’ 동상이 설치됐다.

군복을 입고 줄에 묶여 무릎을 꿇은 전두환의 동상을 향해 시민들은 회초리를

들었다. 뿔망치로 전두환의 이마를 때리며 시민들은 뭇다운 한을 달랬다.

하지만 시민들의 뭇대에 동상 머리 부분에 금이 갔고 이후 그대로 전시를 이어오다 얼마전 얼굴 부분과 등 뒷부분이 떨어져 나갔다.

일부 시민들은 5·18민주광장 한복판에 동상 얼굴이 심하게 파손된 채 방치되는 것이 ‘용물스럽다’며 광주시에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기도 했다.

밧치와 복원 논란 속에 최근 5월 단체와 광주시 등이 관련 내용에 대한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5월 단체 관계자는 “5월단체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라며 “분노 표출 방법으로 동상을 뿔망치로 때리도록 했는데 분노로 깨진 동상을 왜 굳이 복원하는냐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당초 의도한대로 동상이 제 기능을 못하는데 복원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 장성군 상무대 무각사에 보관된 ‘전두환 범종’에 대한 반환여부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광주시와 5월 단체는 종의 반환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굶은 ‘종교적으로 미묘한 사안’이라며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전씨는 1981년 광주 상무대를 방문해 상무대 군 법당인 범무사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범종을 기증했다. 높이 3m, 2톤 무게의 범종 몸체에는 ‘상무대 호국의 종’이라고 쓰여 있고 그 옆에 한자로 ‘대통령 전두환 각하’라고 새겨져 있다.

1994년 상무대가 장성으로 이전했지만 이 종은 광주 5·18기념공원 내 사찰인 ‘무각사’에 그대로 보관돼 있었다. 시민들의 반발로 2006년 12월 철거된 뒤 행방이 묘연하다 다시 장성 상무대 법당으로 옮겨져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2014년 드러났다.

5·18민중항쟁 40주년,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했고 공식 조사에 돌입했다. 5·18 광주학살 최고 책임자, 발표명령자가 드러나 비석을 밧고 뿔망치로 동상을 때리는 ‘단죄’가 아닌 법적 역사적 처벌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신봉우 기자

## 무더위에 ‘열화상 카메라’ 무용지물되나?

### 측정 장소 온도 영향 많아 건물 로비 등으로 이동 필요 통과해도 방역 신경써야...

올해 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가려내기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통상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 등을 설치해 기준 체온(37.5도)을 넘으면 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기준 체온을 넘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기온은 대부분 내륙에서 31도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잠깐의 외부 활동으로도 체열이 기준 체온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

다.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인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열화상 카메라는 측정하는 장소의 온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그걸 감안해서 실내의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곳에 기계를 두고 사용해야 한다. 이를 테면 건물 로비에 두더라도 출입구에서 얼마 만큼 떨어진 곳이 좋다”고 했다.

이 경우 건물 안으로 들어온 이들의 체온이 자연스럽게 본래 체온을 찾은 뒤 열화상 카메라를 거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원석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원래 열화상 카메라가 일일 좀 줄어드는 측면은 있지만 정확도 측면에서는 좀 낮다”면서 “건물 출입 단계에서 발열 증상 여부를 잘 모니터링 해야하는 건 맞는데 열화상 카메라만으로 적절하게 스크리닝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인호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면 과태료

오는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자체별로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7일 요청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주민이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할 때는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 올려야 한다.

오는 29일 시행되며 다음달 31일까지인 계도기간에는 계도장을 발송하고 8월3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소화전 5m 이내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며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역별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행정예고 사항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에서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지난 2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대한 노면 표시와 안전 표지판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예산(국비 78억원·지방비 78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중환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듦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D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